

오색케이블카 102억 국비 확보 무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가 무산됐다. 문화올림픽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일인 2일, 도 정치권과 기획재정부는 오색케이블카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지만, 도가 요청한 102억원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이를 끌내 외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비를 투입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오는

문화올림픽도 대폭 삭감... 170억 중 70억만 반영 도 목표액은 6조2천억에서 1천억 가량 초과 달성

2018년 2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부처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등 국비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문화예술 부문 100억원, ICT콘텐츠 70억원 등 총 17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40% 수준인 70억원만 반영됐다. 사전 불 조성 및 문화올림픽 실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기본설계용역비 15억원을 확보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정부안(8,807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제2경춘국도(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확장사업은 3억원의 용역비가 반영됐다. 포항~삼척 철도는 5,669억원,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3,263억원(도로

공사분 포함), 제2영동고속도로 2,021억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115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도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인 6조2,000억원을 1,000억원가량 초과 달성(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은 386조3,99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 순(純) 삭감된 규모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5,064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데 이어 내년도도 예비비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한다. 서울=홍현표기자

‘제2경춘국도·여주~원주鐵’ 신규 반영

국비 확보 내역 살펴보니

2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와 18개 시·군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 예산이 신규로 담겼다는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증액된 도 관련 예산은 400억원 수준이다. 제2경춘국도인 국도 46호선(남양주~춘천) 확장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착수를 위한 용역비 명목으로

오색케이블카 비롯 핵심 사업 미반영·대폭 축소 아쉬움 속 시·군 숙원사업 확보는 성과

3억원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춘천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및 춘천~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도의 오랜 숙원인 여주~원주 전철 사업의 기본설계용역비 15억원이 확보된 것도 고무적이다. 당초 정부가 내년도 철도기본계획비 명목으로 120억원의 수시배정 예산을 세워둔 만큼 별도 편

성은 어렵다고 관측돼 왔다.

총 사업비 548억원(국비 405억원+지방비 143억원)인 양구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은 기본용역비 명목으로 5억원을 확보했다. 도시가스 배관이 불가능한 도내 점령지역 중 화천지역에 LPG 배관망 사업비 70억원이 확보됐다. 정선 남면~정선읍 국도 건설은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총 사업비 776억원으로 총 15.5km 길이의 2차선 국도 건설로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또 국도 6호선(용천내운동~용둔3거리) 4차선 확장 사업도 5억원의 실시설계비가 확보됐다.

하지만 도가 연초부터 예산확보에 주

력했던 오색케이블카 등 핵심 사업에 아예 미반영되거나 대폭 축소돼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통영 등 일부 지자체가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해 운영 중인 케이블카 사업이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도와 해당 지자체에 떠넘겼다.

정문헌(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일반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전례도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초에 예비비나 관광진흥기금 등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2016년도 관련 국비 확보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정부안(A)	도 요구액(B)	국회 증액(C)	최종(A+C)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630	630		630
여주~원주 전철 사업	15	15	15	15
문화올림픽	170	70	70	7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102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50			
원주~강릉 철도 건설	8,807	9,350		8,807
포항~삼척 철도	5,669	5,000		5,669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건설	3,263	3,285		3,263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2,021	2,021		2,021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	9	5	5	5
점령지역 주민대피시설 조기 확충	38.4	64	27.6	66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76	74	38	114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115.4	115.4		115.4
동계올림픽 기존 경기장 보수	257	307		257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 경관지원	20	43	30	50
원주 1군수지원시량부 이전사업	163	150	-13	150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확장사업	5	3	3	3
춘천레고랜드 진입교량	115.4	115.4		115.4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사업	7.5	7.5		7.5
강원디자인센터	8.5	11.3		8.5
정선읍 남면~정선읍 국도 건설		2	6	6
강원권(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11.4	64	10	21.4
동해항 북부두 개축공사	85	40	40	125

“자본금 확보 위해 사채까지” 중소건설사 비상

결산 이전 일정액 미확보 시 영업정지 ... 경영난 겹쳐 업계 이죽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연말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결산일 이전까지 일정 부분 자기자본금을 확보해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현행 회계법상 토건은 12억 원, 건축은 5억원, 토목은 7억원, 전문건설업체는 2억원에서 최고 10억원의 자본금 가운데 사무실임대료와 차량구입비 등 실질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산 이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중소건설사들은 최근 계속된 경영난 악화와 공공공사 수주물량 감소에 따라 자본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도내 업체 대부분이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목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신용문제로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도 없어 제2금융권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받거나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받고 대출은 높은 이자에 상환부담이 커 지역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조기 발주 및 물량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발주량 부족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이 심해져 대부분 연말 자기자본금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동서고속철 국비 확보 무산 오색케이블카 예산도 올림픽 경기장은 반영

총 306조원 규모의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심철도 현안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춘천-속초철도 등의 국비예산 확보가 무산됐다.

강원도 등은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앞두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 244억원 중 102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 관광기금 편

성이 무산되면서 이 사업은 일단 도비 등으로 추진하게 됐다.

춘천-속초 철도의 경우 도 정치권은 별도로 국비 50억원 편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중으로 별도 비록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시 타당성조사(130억원) 중 일부가 편성될 것으로 전

망된다.

하지만 도 현안 중 하나인 문화올림픽 예산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관련 예산 등은 국비에 반영됐다.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예산은 170억원(문화예술 부문 100억원 + ICT콘텐츠 70억원) 가운데 7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예산(100억원)과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예산(70억원)이 통합된 형태로 170억원 중 7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기존

경기장 보수, 진입도로 건설 등을 위해 강원도가 671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업추진이 확정된 여주-원주 철도 사업은 내년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15억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 관련기사 3면 서울·인천수



제19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오늘 오전 11시 춘천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

“국제기준 맞게 제도·관행 쇄신해야”

姜국토, 건설업계와 간담회... 업역체계 유연화·부실기업 퇴출 환경 조성 등 강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업계와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게 운영 중인 국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등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제도와 보증제도의 변별력 강화, 부실기업 퇴출, 업역체계 유연화, 불공정관행 개선을 쇄신책으로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 12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이 강했지만, 업계에 대한 주문과 쇄신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제도 쇄신에 대해서는 “입찰제도와 보증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기업에는 기회를 주고 부실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역 체계 유연화도 강조했다. “지금의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체계로는 혁신이나 돌파(Breakthrough) 기술 개발도 어렵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구축은 더욱 요원하다”는 것이 강 장관의 판단이다.

불공정관행 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질적인 원·하도급 간 불공

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보증기관의 불공정관행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건설산업 위기에 대해서는 “경기 사이클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단순 도급형 사업에서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발굴기획, 개념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전문가 양성과 인력 고급화를 통해 수익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장관은 특히 “정부도 한국형 상생모델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건설 외교는 물론, 최근 발표한 ‘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KOIF)’ 조성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취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글로벌 건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주계약자관리방식)

국가계약의 경우는 최저가격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고,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불이행 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불이행 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①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구성원 간(주계약자를 포함)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